

“수사할 검사가 없다”...검찰 인력 공백 심화

사직·휴직·파견...광주지검, 실근무 54.8% 수준 순천지청 정원 절반 근무...업무 과중·사건 적체

전국 검찰청에서 사직과 휴직, 파견 등이 이어지면서 일선 수사 인력이 빠르게 줄고 있다. 광주지방법검찰청 역시 정원 대비 실제 근무 인원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사건 처리 지연과 업무 과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6년 2월 기준 전국 검사 현원은 2034명으로 정원 2292명보다 259명이 부족하다. 여기에 휴직·파견·연수 등으로 일선에서 직접 수사를 맡지 않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실제 수사

인력 부족 규모는 600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 정원의 약 28.5% 수준이다.

이 같은 인력 공백은 특히 지방 검찰청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광주지검은 정원 73명 가운데 실제 근무 인원이 40명에 불과해 실근무 비율이 54.8%에 그쳤다. 이는 전국 지검 평균 실근무 비율(66.4%)보다 낮은 수준이다.

광주·전남 지역 지청도 상황은 비슷하다. 목포지청은 정원 16명 중 12명이 근무

중이며, 장흥지청은 정원 4명 중 3명만 근무하고 있다. 순천지청은 정원 31명 중 17명만 현장에 남아 사실상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해남지청은 정원 4명이 모두 근무 중이지만 인력 규모 자체가 적어 사건이 몰릴 경우 업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검사 배치하는 대검찰청 인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 차원에서 인력 부족을 자체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다”며 “파견과 휴직, 직무대리 등으로 빠진 인원이 있어 남아 있는 검사들에게 사건이 집중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파견 2명, 직무대리 1명, 휴직 2명 등 여러 명이 빠져 있다”며 “다만

특정 지역이라서 인력이 적게 배치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장기화 될 경우 수사 공백과 조직 운영 부담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전국적으로 검사 사직이 이어지면 현원은 최근 몇 년 사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검사 수는 2022년 2177명에서 2023년 2105명, 2024년 2064명으로 줄어드는 데 이어 올해는 2034명까지 감소했다. 반면 검사 정원은 2019년 이후 2292명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인력 감소는 검찰의 기본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국 지검과 지청 가운데 인권감독관이 배치되

지 않은 곳이 16곳에 달해 인권 보호 기능 약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정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기간도 길어졌다. 형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142일에서 지난해 312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지방 검찰청의 구조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한 변호사는 “지방청은 인력 규모 자체가 작아 몇 명만 빠져도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며 “지방 검찰청의 인력 배치 기준을 재검토하고 보완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 맑음 06:52 달맞이 18:35
☁️ 맑음 17:58 달맞이 09:29



광주	☀️	-1~9
목포	☀️	0~8
여수	☀️	2~10
순천	☀️	0~10
구례	☀️	-2~10
광주	☀️	-2~9
신도	☀️	0~10
흑산도	☀️	3~8
진남	☀️	-1~11
진도	☀️	1~8

목포	미물(고)	05:40 / 17:26
	샘물(저)	10:43 / 22:47
여수	미물(고)	00:05 / 12:01
	샘물(저)	06:05 / 18:01

비매품 화장품 판매 벌금형

만년필 비매품 화장품 인터넷에서 판매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져.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

A씨는 2024년 10월27일부터 2025년 1월2일까지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통해 비매품 화장품 등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A씨는 제품 홍보를 위해 제작된 비매품 화장품과 포장·표시 사항이 훼손된 파운데이션 등을 총 4차례에 걸쳐 판매했던 것으로 조사.

재판부는 “화장품 유통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지만 “판매한 화장품의 수량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 동구 ‘스마트 건강도시’ 조성 본격화

2030년까지 4대 정책 추진...보건·의료·환경 연계

광주 동구가 사람 중심의 건강한 지역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건강도시 조성에 나선다.

동구는 지난 6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국제회의실에서 ‘스마트 건강도시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스마트 기술로 건강을 잇(IT)다’란 주제로 열린 이번 선포식에는 임택 청장과 주민, 스마트 건강도시 자문위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스마트 건강도시 비전은 ‘기술로 연결하고, 돌봄으로 살피며, 주민과 함께 만드는

스마트 건강도시’로 기반구축기(2026~2027년), 사업확산기(2028~2029년), 사업고도화·거버넌스 내재화(2030년) 등 3단계 로드맵으로 나뉘었다.

로드맵은 디지털 스마트 생활 시스템, 맞춤형 건강관리,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주민 주도 건강 공동체 등 4대 정책과 11개 전략으로 구성됐다.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약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서비스를 강화하고, 보건·의료·복지·환경 등 도시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송태영 기자 sty1235@



광주 동구는 지난 6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국제회의실에서 ‘스마트 건강도시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광주 동구

광주교육청, 초등학교 ‘관계회복 숙려제’ 도입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 대화·상담으로 해결 유도

광주시교육청이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 간 갈등을 대화와 소통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관계회복 숙려제’를 새롭게 운영한다.

광주시교육청은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처벌 중심 대응을 넘어 관계 회복을 우선하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제도는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갈등이 더 확대되는 상황을 줄이고 학생들이 서로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초등학교 사이에서 비교적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에 앞서

대화 중심의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일정 기간 숙려 시간을 가지며 상담과 갈등 중재, 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다.

시교육청은 해당 제도가 현장에 자리 잡을 경우 학생 간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공동체 회복과 재발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부터는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관리도 강화된다. 각 학교는 학년에 따라 수업 시간 동안 스마트폰 등 개인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교육 활동에 필요할 때만 활용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고흥 굴 양식장 이주노동자 착취 의혹...경찰 내사

폭행·협박·감금 여부 조사...“브로커가 노동·생활 통제”

전남 고흥의 한 굴 양식장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상대로 노동 착취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해당 양식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일 현장을 찾아 상황을 확인하고, 필리핀 국적 여성 A씨(28) 등이 지난 달 25일 광주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제출한 고소장과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

노동·시민단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취업 계절근로 비자(E-8)로 입국해 고흥의 굴 양식장에서 일하며 매일 새벽 3시부터 12시간 넘게 굴 껍데기를 까는 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 209만원이 명시됐지만 실제 지급액은 첫 달 23만여원에 그쳤고 이후에도 120만~144만원 수준이었으며 올해 2월 임금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시급 대신 굴 1kg당 단가로 임금을 계산했고, 급여도 사업주가 아닌 브로커를 통해 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브로커가 노동자들의 작업 배치와

생활을 관리했으며 외출도 허락을 받아야 했다고 진술했다. 계약에 없는 농장 노동에 동원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노동단체는 지난 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브로커가 노동 배치와 임금 정산, 생활 관리까지 통제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성훈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2팀장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제107주년 광주 3·10만세운동 재현 행사

광주 양림동서 울려 퍼진 함성 “대한독립 만세”

수피아여중·고, 송일고 학생 등 1000여명 참석 독립선언서 낭독·대형 플래시몹 등 ‘만세 행진’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지난 6일 오후 2시 광주 남구 양림동 수피아여자고등학교에는 107년 전 그날의 비장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신정훈 국회의원, 김병내 남구청장, 김중일 광주지방보훈청 총무과장(청장 직무대리)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유족, 수피아여자 중·고등학교, 송일고등학교 학생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광주 3·10만세운동 재현 행사는 만세 걸기 퍼포먼스, 기미독립선언서 낭독, 만세 삼창, 만세 행진, 플래시몹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수피아여고와 송일고 학생들은 수피아여고 후문에 있는 광주 3·1 만세운동 기념 동상에서 운동장으로 내려오는 동안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독립선언서를 뿌렸다. 학생들은 오방 최홍중 기념관과 함께 준비한 시민 거리극 ‘3·1 만세운동의 불씨가 되어’를 선보였다.

이승준 송일고 학생과 한지연 수피아여고 학생을 비롯해 각계각층 참여자가 한 구절씩 독립선언서를 나눠 읽었고, 최홍중 목사·김철 지사 등 독립운동가 유족 대표가 선장과 함께 만세삼창으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107년 전 독립운동의 함성을 재현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만세행진’이었다. 참여자들은 수피아여고를 출발해 양림교회, 3·1만세운동길, 옛 송일학교터, 양림오거리 등 1.7km를 다니며 대극기를 높이 흔들었다.

양림오거리에 도착한 수피아여고 학생 400여명이 “대형 플래시몹”을 선보이며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길을 가던 시민들은 학생들 모습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손을 흔들거나 ‘저랑 스타다’고 힘을 불어넣었다.

한정현 수피아여고 사회교사(학생부장)는 “역사는 책으로 배우지만, 역사의식은 경험을 해야만 온전히 느낄 수 있다”며 “학생들이 간접적으로 107년 전 그날을 경험해 광주 3·10만세운동과 광주 출신 독립운동가를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지연양(18·수피아여고 2년)은 “학



지난 6일 오후 광주 남구 양림동 수피아여자고등학교에서 제107주년 광주 3·10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진행됐다.

생 대표로 독립선언서 낭독과 3·1절 노래를 해야 한다는 소식에 1주일 전부터 틈틈히 연습했다”며 “학교 선생들의 정신과 자랑스러운 역사 현장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독립운동의 공로를 기리는 기념식도 함께 진행됐다.

광주 3·1운동 기념사업회는 제3회 광주 3·10 독립 만세운동상 수상자로 광주 출신 독립운동가 정광호 선생을 선정했

다. 정광호 선생은 일반 매지대학 재학 중 독립선언서를 인쇄·배포하고, 1919년 3월10일 광주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권력 재판으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

글·사진=송태영 기자 sty1235@